

[고령화사회와 심각성]

0. 고령화사회란? (4p)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나라**를 말합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기간은 **7년4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달하였으며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분의1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고령화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6p)

대한민국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들을 모은 자료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일할 젊은이가 없다”, “**6070** 인구가 **3040**을 추월” 같은 표현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며, 사회적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빈곤, 연금수령 부족, 저출산과 맞물린 성장둔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OECD**에서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복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2.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상위권 (7p)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3%로 **OECD 평균인 10.1%**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3. 2000년 이후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추이 (8p)

파란색 선인 고령인구지수는 **2.9배**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연한 보라색 선인 생산연령인구지수는 거의 정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의미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생산 가능 인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경제·복지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노인복지정책별(의료, 일자리, 연금) 설명하기 전에 말할 내용 (선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령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노인의 빈곤, 건강, 고립,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
의료 인프라, 일자리 정책, 연금 및 소득 보장,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현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 각 항목별로 분석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정책] <의료 인프라 분석>

1. 지역별 고령층 인구 비율 (p10)

위 자료들은 지역별로 65세 인구 비율에 대해 시각화한 자료들입니다. 분석결과 전남, 경북,
강원 등 지방 지역일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역별 병원요양시설 수 (p11)

그다음 지역별로 병원,요양시설은 몇개 있는가 시각화를 해보니
의료시설수는서울•경기등수도권과광역시예집중되어있으며,
비수도권지역은상대적으로낮은접근성을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3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원시설수가 적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3. 1만명당 의료 요양시설 수 (p12)

지역별 노인비율과 요양시설 수를 이용해 1만명 당 의료/요양시설 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제일많은 지역과 제일 적은 지역은 무려 2배이상 차이가 나며, 수도권 광역시 중심, 고령화
심화된 지역일수록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해결방안 제시 (p13)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료취약지역 지정 및 거점병원 확충, 의료 인력 배치, 방문 진료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

1. 노인 일자리의 동기와 만족도 요인 분석 (15p)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인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7.9%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층이 여전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노인 일자리 참여 후 효과 요인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비중은 ‘소득 증가’가 56.6%로 나타났지만, 신체건강 유지나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계 지원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 노인 일자리 정책 소개 파트 (16p)

정책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복지 향상을 돕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익형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중심으로, 대표적인 저강도 활동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이나 안전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매점 운영이나 제조·판매 등, 소규모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형은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로, 민간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3. 노인일자리 정책 변화 전 후 고용률 변화 (17p)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모든 지역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충북, 전북, 대전은 10% 이상 상승하며 정책 변화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노인 고용률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노년층 고용률과 빈곤율의 관계 (18p)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고용률은 2014년 39%에서 2022년 44.5%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책 변화나 사회적 관심 증가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그래프인 상대빈곤율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히 일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현황>

1.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령액 현황 (20p)

급여지급액과 수급자 수 동반 증가

급여지급액(총액)과 수급자 수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를 반영

수급자 수 증가 속도와 지급액 속도를 비교했을 때,

급여 지급액의 증가 속도가 수급자 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수급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추이

매년 상승하는 경향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

최근 몇 년간 평균수령액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인사이트

- 앞선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연금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평균 수령액도 상승하고 있기에 재정 건정성 관리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연금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고령화 진행 및 노후 대비 필요성을 강조

2.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21p)

노인 인구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

수급률은 대체로 65%~68% 수준에서 유지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하락하는 경향

* 인사이트

-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즉,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

3. 기초연금 지급액 추이 (22p)

연도별로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2018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지급액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커짐

부부가구 1인 수급액이 가장 높고, 단독가구 지급액과 부부가구 2인 수급액(1인당)이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 인사이트

-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 및 정책적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급액 증가는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의 노인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

4. 노인가구 소득 현황 (23p)

- 노인 가구 소득 구성 (근로소득, 연금 비율)
- 노인 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 공적연금의 소득 기여도는 제한적
- >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의 급여 수준이 낮음을 반영
- 노인 가구의 소득 구조를 보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소득원(예: 공적연금)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 인사이트

- 한국 노인 가구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의존도가 높다
-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안정적 노후 생활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노인 복지 정책의 지속적 강화 필요

5. 노인빈곤율 (p.24)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최근 10년간 개선됨을 확인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

* 인사이트

-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최상위 수준, 전반적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유지
- 빈곤율 격차: 다른 OECD 국가들은 10~20%대 수준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40%에 육박하여 노인빈곤 문제 부각

6. OECD 국가와의 비교 (25p)

한국이 OECD 국가 중 빈곤율 최고 수준, 한국이 1위
대부분 국가의 빈곤율은 한국보다 낮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및
소득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기초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7.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복지정책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 (26p)

첫째,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

둘째, 소득 다변화 정책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운용이나 재산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안정적 수입 기반을 마련해야 함

셋째, 궁극적인 빈곤을 해소
이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필요

<국가별 복지 예산 비교>

1. 노인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의 국제 비교 (28p)
우리나라도 노인 복지의 발전과 함께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 지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선진국 및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 재정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해외 고령사회 대응 우수사례 조사 및 제안도출>

일본 - 초고령 사회의 선두 국가 (30p)
일본의 대표적인 노인정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 요양, 예방, 주거, 생활지원 등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임.
이 시스템의 핵심은
1. 지역 내에서 평생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다는 철학,
2. 고령자 근처에 보건소 및 재활시설 배치와 방문진료 지원,
3.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등 사회적 연결을 유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단순히 병원 확충에 집중하기보다, 지역 중심의 통합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독일 - 지속가능한 연금 및 요양제도 (31p)
독일은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가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중임.
주요 특징으로는
1. 소득 기반의 보험료 납부,
2. 현금급여 또는 요양서비스 중 선택 가능(유연성),
3. 가족이 직접 돌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등이 있음.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요양 돌봄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됨.

덴마크 - 노인을 위한 '탈시설화' 선진국 (32p)
덴마크는 장기요양시설을 축소하고, 노인이 각자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임.
이미 1980년대부터 요양원 신축을 제한해 왔으며,

일정 조건 (덴마크 내 거주, 일상생활의 자립 여부 평가 등)을 충족한 경우, 생활보조
헬퍼를 배정하여 주거·식사·간호 등을 제공함.
이처럼 고령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복지 접근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됨.

해외 고령사회 대응 우수사례를 통한 제안 (33p)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1.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
2. 시설 중심의 돌봄으로 인한 개인 부담 집중,
3. 공공·민간 시스템 간 연계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 돌봄수당 제도화를 통해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부담을 분산하며, 공공과 민간의 플랫폼을 통합해 서비스 연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 및 기대효과>

1. 분석 결과 및 요약

저희가 분석한 노인복지정책 결과를 요약해보면, 의료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중이나 단기,저임금이며, 일자리 만족도가
낮고 지속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 연금제도도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연금 제도를 개혁 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기대효과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별로 맞춤형 의료
인프라 확충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자리 + 소득보장까지 연계한 복지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노인의 자립성,건강수명,
사회참여도도 증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의)

본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단순한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